

# 안중범 수첩·공정위 업무일지가 청탁-대가 입증 '스모킹 건'

## 이재용 이번엔 구속될까

박영수 특별검사가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제청해 그의 운명은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법원은 16일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혐의 입증 정도,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평가와 다툼의 여지, 증거인멸 염려 등을 두루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점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제시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짐작할 수 있다. 법원은 당시 ▲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 ▲관련자(뇌물수수 혐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첫 영장 기각 이후 3주에 걸친 추가·보강 수사를 통해 당시 기각 사유들을 보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61·구속기소)을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차 영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이 구성됐다면 이번에는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추진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으로 대가 관계의 범위를 넓혔다.

특히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수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등 삼성 측을 향한 편의 제공에 청와대가 관여한 의심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해 부정 청탁과 대가 관계 입증

## 특검 3주 걸쳐 기각 사유 보장

###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 경영권 승계 전반 대가성 규명

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안중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에서 추가 확보한 39권의 업무 수첩과 이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에서 넘겨받은 관련 직원 업무일지 등이 의혹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범으로 규정된 최순실씨를 형식적으로나마 조사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심사 결과가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팽팽하게 맞선다. 통상의 뇌물 사건과 달리 '합병 등 조치가 먼저 이뤄지고 죄책 지원이 뒤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특검이 확보했다는 물증과 진술도 간접 정황일 뿐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큰 틀에서 기본 혐의에 추가적인 내용을 얹은 것일 뿐 새로운 틀로 바뀐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최씨가 특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뇌물수수 혐의자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도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삼성 측은 합병 과정이나 그 이후 어떠한 특혜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영장심사에서 특검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 서석구(왼쪽) 변호사가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임위 격돌...2월 국회 시작부터 파열음

### 환노위 삼성전자·MBC 청문회 의결...자유한국당·바른정당 반발

14일 상임위가 일제히 열려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조기 대선을 둘러싸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격돌하는 모양새다. 전날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에 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국지엠 노동조합 채용비리 사건이 대상에서 빠지고 삼성전자와 MBC가 포함된 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측 환노위에서 청문회 안건의 일방적 날치기 통과를 저행했다”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역사교과서 금지결의안에 이어 연달아 날치기 통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한 방문해 “환노위 날치기를 원천 무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흥영표 환노위원장 거거(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그걸 덮기 위해 폭거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

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남측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바른정당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소수당일 때는 끊임없이 합의처리를 주장하더니 한 사람의 찬성으로 의사일정을 일방 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 송부돼 오히려 절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 팽팽한 힘 대결을 예고했다.

반면 야권은 여당이 ‘경제민주화법’인 상법 개정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전선을 확대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설사 해당 상임위 간사와 상임위원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법은 재벌 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직권 상정이 이뤄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고영태 녹음파일 5개 20일 최순실 재판서 공개

### 최씨측 변호인 편집 1시간 분량 현재 탄핵심판 안봉근 또 불출석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와 측근들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 일부가 오는 20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공개된다. 총 29건의 녹음파일 모두를 공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씨와 안중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최씨 측 요청에 따라 20일 재판에서 고씨 측근(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 5개를 증거조사한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공개하기로 한 녹음 파일 5개는 최씨 측 변호인이 검찰로부터 확보한 것이다. 최씨 측은 5개 녹음파일을 편집해 1시간 분량으로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고씨 측근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000여건을 모두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고씨와 류상영 전 더불어민주당 부장, 박현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해당 녹음파일 내용은 이달 6일 고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일부가 공개됐다. 고씨가 지인과 대화하면서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이...정리를 해야지”라며 자신이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었다.

녹음파일 대부분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난색을 표해왔던 검찰은 “변호인이 재생을 요청하는 김에 검찰이 신청한 전체 29건의 녹음파일을 함께 (공개)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일 내로 재생을 모두 마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결정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생 예상 시간을 상정하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을 최지근 거리에서 보좌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세 번째 출석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10시 현재 1층 대심판 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불출석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13일) 오후 안 전 비서관이 전화해 ‘증인신문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만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과 19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당시에도 안 전 비서관은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나오지 않았다.

현재는 불출석이 확인되자 대통령과 국회 측의 동의를 얻어 증인체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는 현재가 앞서 “불출석 증인은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인은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